

#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6. 3. 20 (화) 평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06. 3. 28(화)
- 다. 상정일자 : 2006. 6. 22(목) 제12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6.6.22) 상정·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재무과장 김장래)

-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가 전자입찰제도를 시행함에 따라서 발주기관의 행정 비용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입찰수수료를 폐지하여 지자체발주공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체의 부담을 없애고자 하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별표1>을 일부 개정하는 바 그 내용은 입찰참가신청서 1건당 10,000원의 수수료 징수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함경호)

- 가.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특정인을 위한 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입찰건당 수백여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입찰진행에 과다한 행정인력이 소요되던 시기에 1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입찰참가자로부터 징수하였던 것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나. 주요내용은

- 전자입찰제 도입 및 대형건설업체가 참가하는 조달청 발주공사에는 수수료가 없으나, 중소기업체가 참여하는 지자체발주공사 입찰참가자에게만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가

제기되어

왔고

- 감사원 및 행정자치부와 강원도에서도 이 규정에 대한 폐지권고와 감사원 감사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수수료 징수규정 등이 부정하다는 지적과 주의지시에 따라 평창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을 일부개정하는 것임

다. 검토결과

- 이로 인해 평창군의 세외수입 수수료수입예산 8,405만원은 감액되나 입찰참가수수료를 징수하는 주업체의 80% 이상이 우리군 관내 영세업체인 상황을 감안 지역 영세건설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 강원도내 타지방자치단체도 상반기중 이 규정을 폐지하는 추세이므로 우리군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기타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9
----------	-----

제출년월일 : 2006. 3.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전자입찰제도를 시행함에 따라서 발주기관의 행정비용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하여 지자체발주공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체의 부담을 없애고자함.

## 2. 주요골자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별표1>을 일부개정하는 바 그 내용은 입찰참가신청서 1건당 10,000원의 수수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입법예고 : '06. 2.15 ~ 3. 6 실시결과 제출의견 없음

다. 예산조치 : 추경시 2006년 세외수입 수수료수입 예산에 계상된 84,050천원은 정산 후 삭감조치

라.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마. 합의 및 협의 : 해당사항 없음.

##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증명)란의 12-1호 입찰참가신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별표1>			
구 분	기준	수수료액	비고	구분	기준	수수료액	비고
12-1. 입찰참가신청				12-1. <삭제>			
입찰참가신청서	1건	10,000					

## - 관 계 법 령 발 취 -

### ○ 지방자치법

제128조 [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0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 감사원처분요구사항 통보내용

「기업불편사항 개선실태」에 대한 감사실시('04.10.18 - '04.11.26)

행정자치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자입찰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전자입찰참가에 따른 입찰참가수수료 징수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면서 발주기관의 행정비용 절감 등을 위해 도입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으로 입찰관련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되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일부지방자치단체가 입찰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입찰참가업체에 부담을 주고 있음.

### ■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관리과-310(2004. 7. 7)호의 내용

현재 대형건설업체가 참가하는 조달청 발주공사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으나 주로 중소기업업체가 참가하는 지자체발주공사 입찰참가자에게만 수수료를 징수하는 점에서 형평성을 기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입찰참가수수료 폐지 개선 재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시군에서는 입찰수수료징수 폐지 개선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